

OPINION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김상훈 세상읽기

‘반값 00’이 대세인 이유



논설실장

#1. 강진군은 지난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 화폐로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반값 여행’을 시행했다. ‘반값 여행’은 강진 관외 거주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비용의 절반을 지역화폐인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광객의 여행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돌려준 정산금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게 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1년이 넘는 현재 반값 여행은 국내 최고의 여행 키워드로 부상했다.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사전 신청을 하고 290통 이상의 문의전화를 할 정도로. 실제 지난해 반값 여행 참여자는 강진에서 47억원을 소비했고 돌려받은 지원금 22억원을 또 강진 농·특산물 구매 등에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총 69억원을 강진에서 소비해 지역 내 1800개 이상 업체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올해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해 혜택을 더욱 늘렸다. 운영비와 정산금으로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개인당 최대 5만원이었던 혜택을 10만원으로, 지원 횟수도

개인당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2인 이상은 여행경비의 50% 최대 20만원까지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대박이 났다. 읍들이 지난 23일까지 82일간 무려 2만4807팀(하루 평균 302팀)이 사전신청을 한 것이다. 또 이 기간 이미 1만3036팀(하루 평균 158팀)이 강진에서 34억6000만원을 소비하고 이중 15억560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았다.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지난해의 83% 수준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경남 하동군, 산청군, 완도군 등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2. 한때 호남지역 최대 상권이자 젊은이들의 성지였던 광주 동구 충장로에는 ‘반값 임대’가 등장했다. 광주시와 동구는 지난 12일 총장로1·2·3가 상인회와 상가 건물주와 함께 ‘반값 임대료 상생 협약식’을 했다. 이날 협약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를 대표하는 상권이었던 지금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가게 4곳 중 1곳이 비어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장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총장로 건물주들은 공실 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40~50% 인한된 가격으로 공급, 최소 2년간의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상인회는 총장로 상권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동구도 상가공실 반값 임대 상생모델의 성공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3. 뿐만 아니다. 편의점을 이용한 ‘반값 택배’도 인기다. 현재 GS25에서 ‘반값 택배’, CU에선 ‘알뜰 택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택배를 보내거나 찾기 위해서 직접 편의점으로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기존 택배 가격보다 절반 가량 저렴해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도 가세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 23일 현재 5264개 업체와 계약하고 모두 7만9000여개의 택배 물량을 발송했다. 이어 5월부터는 국제특급우편(EMS)도 최대 39%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도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다음 달 6일까지 19개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김치, 고등어, 오징어 등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반값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고 한다. 이처럼 지자체와 기업들이 앞다퉈 ‘반값 00’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암울한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고환을 고물가, 고금리 등 3고시대의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여행만 가고 물건만 구매하는 등 소비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발 관세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이같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불황은 이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됐다. 다시 말해 ‘반값 00’은 현 상황에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다.

기고

임원식

(사) 광주예술회 회장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예술계 성장 계기 되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한국 2035’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예술단을 광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는 창작 인력이 부족하고, 문화 접근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의 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역예술계에 몸 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한국적 가치를 공연으로 구현하는 대표적인 국립예술단체인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 자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열린 44,901건의 문화예술활동 중 15,548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그 다음으로 경기에서 5,028건이 개최되는 등 수도권에서의 문화예술활동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은 창작활동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지역 간 문화예술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창작 공간이자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서울예술단의 공연이 시너지를 이루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문화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에게도 창작 기회 확대와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예술단이 보유한 고유한 예술적 기량과 노하우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맥락을 확장하며 상호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또한, 서울예술단 이전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연과 예술행사 운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역 문화관광 소비도 증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단순히 한 예술단체의 이동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환경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동안 문화예술활동의 환경이 양호한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서울예술단으로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다소 도전적인 상황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 교류의 거점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활동영역이 수도권에서 지역은 물론 아시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도 될 수 있다. 국립예술단체 중 첫 사례라고 하니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는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서울예술단의 지역 안착을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연습공간, 공연장 등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전하는 국립예술단체의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예술 활동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이 수도권과의 단절이 아닌 균형 잡힌 문화 향유 생태계의 활력 거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예술인, 지역 대학 등과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예술계와 동반 성장하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할 중요한 과제이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을 비전으로 창작 발전소이자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 또한 새로운 지방 문화예술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광주에서 펼쳐질 서울예술단의 멋진 공연과 예술적 혁신을 시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취재수첩

산불, 예방이 최우선



이승홍 지역사회부 부장대우

포했고, 국가 산불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한 재난을 넘어선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광주·전남은 현재까지 큰 산불 피해는 없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산불의 대부분은 주민이나 임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이번 산불 역시 성묘객과 작업자 등의 실수로 발생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고 한다. 즉 인제 어디서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산림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다. 평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산불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화기물질을 소지한 채 임산을 하거나 논·밭두렁 소각,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태우기, 차량 이동 중 담배꽂초 투기 행위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화재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겹칠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잦아 미가 된 산림은 물론이고 인명과 재산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75명으로 늘어났다. 사망자 30명, 부상자 45명 등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이재민은 3만7000여명에 달한다. 피해 산림 면적도 서울 면적의 80%에 이르는 4만8238ha나 된다. 역대 최악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2만3794ha)을 훌쩍 넘어섰다. 이 뿐만 아니다. 피해액도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울진·삼척 산불(9086억원)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귀중한 문화재 소실도 18곳이나 됐다. 이번 산불로 정부는 영남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

독자투고

농기계 ‘음주운전’ 근절해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의 경우 농기계 교통사고가 16.6%(2023년 기준)를 기록해 기타 교통사고 치사율인 1.3%보다 약 13배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치사율을 불러 일으키는 농기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단을 비롯해 경찰에서도 농기계 음주운전 단속 관련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운전자들에게 예방차원에서 주의하라고 경고할 뿐,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안전장치 없는 것은 물론, 개방적인 구조 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무방비하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농기계는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는 고마운 도구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교통사고 예방 수칙 준수자 절실하다. 이재복 고흥경찰 대서마을소장

사설

미국 25% 車 관세 부과, 대책마련 절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업체, 특히 대미수출 베스트셀러인 스포츠유틸리티(SUV) ‘스포티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 미 행정부가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면 국내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8.59%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아 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공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생산량 51만3000여 대 중 64.7%가 넘는 33만2000여 대를 수출했다고 한다. 이중 대미 수출 물량은 스포티지와 셀토스, 쏘울 등 3개 차종 18만여대로 전체 수출물량의 55%가 넘는다. 이는 광주공장의 전체 생산량 대비 35% 수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내수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미 수출은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내달부터 미국의 25%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광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공장은 지역 제조업 총생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아 1.2차 협력업체 250여 개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관세부과 등으로 수출 차질이 빚어질 경우 1.2차 협력업체를 비롯해 중소 부품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지역 수출기업들의 무역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초고령 사회 ‘영양형 통합돌봄사업’ 성공을

영양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인 ‘영양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주는 것을 말한다. 영양군은 지난 1월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 군단위로는 최초로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통합돌봄 추진단을 신설했다. 돌봄 정책팀과 통합사례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모두가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사회에 맞게 필요한 법·제도 정비, 물론 주민위기사례 밀착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영양군이 처해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지난 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만5642명으로 전체(5만1116명)의 30.6%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 기준 20%를 초과한 상태다. 이들을 75세 이상은 7925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하고 있고 1인 세대도 54.1%나 된다. 뿐만 아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도 329.4로 전국 167.1, 전남 237.3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삼호읍을 제외하면 65세 이상 비율이 42.4%에 달하는 등 다른 시·군보다 어르신들의 통합돌봄 수요가 많은데다 1인세대가 많아 가족이 기반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작된 이 사업은 다행히 최근 전남도의 통합돌봄 ‘OK 전남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한해 도비 2700만원을 지원받게 된 영양군은 일단 75세 이상 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 돌봄기사를 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 등 중점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전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방문의료’, ‘일상 생활지원’, ‘특화서비스’ 3대 분야로 나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행서비스, 주말돌봄 등 신규 특화서비스도 개발할 방침이다. 영양형 통합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	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060 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남)	편집부 370-7082 사신부 370-705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